

먼저 허가증상에 있는 선원을 경미한 변경신고를 하여 400mCi를 등록한 후 1000mCi를 폐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경미한 변경신고를 하여 1000mCi를 400mCi로 변경하여 폐기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업무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 업무로 신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업체의 시설검사를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전근무(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규제부 방사선이용규제실)

문의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r-85 1000mCi를 400mCi로 교체사용하는 것은 방사성동위원소사용 변경허가에 해당되고, 그리고 감량되는 사항은 신청시 변경전후대비표에 자세히 그 사유를 기록하시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시설검사에 대한 자체점검 감리에 대한 서면심사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7조 (시설검사) 제2항 규정에 의해 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을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에 같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취급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 370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업무대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고, 그 감리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를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에 같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 마당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아두면 편해요

2007년부터 투기지역 외에 비(非)투기지역에서도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 차익의 50%로 높아진다. 또 내년 중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와 함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가 도입되고 올해까지 적용됐던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는 폐지된다. 2007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세금

-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1명이면 100만 원, 2명이면 50만 원을 추가공제하지만 2007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50만 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경감=내년 중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 원(합산 공시가격) 초과 시에만 0.8%의 단일세율로 중부세 부과.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7월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10만 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 원을 포함해 11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2007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음.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 등으로 확대.

금융·증권

- ▷새 1만 원 및 1000원권 발행=1월 22일부터 지금보다 작고,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1만 원, 1000원짜리 지폐 발행.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 학점(24학점) 취득자에 한해 부여하고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보험사별로 자율화. 또 4월부터는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 ▷주주 집단소송제 시행=2006 회계연도까지 분식회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주주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짐.
-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익일환매제 실시=3월 22일부터 MMF 환매를 신청한 다음 날 돈을 받을 수 있음. 현재는 당일 환매.
- ▷미수거래채 폐지 등=증권사에 맡긴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매인 미수거래가 5월부터 불가능해짐. 또 주식 주문 2일 후인 대금결제일까지 매도할 수 없었던 주식매매 규제가 2월부터 없어짐.

부동산

- ▷양도소득세 중과세=비투기 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50%(현재는 양도 차익에 따라 9~36%).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7월부터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현재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됨. 또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매매 시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대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빌리는 것이고, 환매조건부 분양은 건물 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보다 물가상승률을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파는 것.
-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9월부터 민간 택지의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업체도 땅값 건축비 등과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 책정 불가.
- ▷1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기능=상반기부터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 확장 가능.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

보건·복지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비용 대비 효

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또 신약 특허기간이 끝나고 카피약(복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신약의 가격도 20% 인하.

-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 중증환자 기준 지급액도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면적 300m² (약 91평) 이상인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조리 판매할때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갈비 등심 등)를 표시해야.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수입 쇠고기는 국가명 표기.
-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운영=이동 확대, 노인 확대, 위기가정 등 모든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를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
-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서민층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실시=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일제히 실시.

환경 노동

- ▷비정규직 차별 금지=7월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일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도 확대=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한 계약한 것으로

로간주하거나 고용 의무를 부과.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

- ▷주 40시간 근로 확대 및 외국인 고용제도 변경=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 적용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고용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단 국립공원 내 사찰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 징수 가능.

과학기술 정보통신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시행=3월부터 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핵융합에너지의 국가관리체계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금지=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을 연구자가 개인 명의로 특허를 내거나 등록하는 행위 금지.
- ▷대덕특구 법인세 소득세 감면=특구내 첨단기술 기업 및 연구소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뒤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하고 그 이후에는 2년간 50% 감면.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월소득평가액 14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 확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에 포함.
-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음